“韓美 FTA·쇠고기 개방 후속 대책 공적자금 투입 농가부채 탕감해야”

김성훈 상지대 총장 ‘한국농업 … 심포지엄’ 특강

도시민·농촌 어메니티 결합 ‘도농상생’ 작업 필요

김성훈 상지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사진)은 한·미 FTA야말로 우리의 농업·농촌을 고사시킬 주범이라며,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농상생을 기반으로 농촌 어메니티(Amenity·쾌적함)를 살리고 농업인이 저장(1차)+가공(2차)+판매(3차)체제가 복합된 ‘6차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29일 강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한국농업의 2·3차 산업화 전망 및 과제-한·일 국제 심포지엄’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강진군과 농협강진군지부가 주관하고, 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회장 현의송)와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가 공동주최한다.

이날 김 총장은 ‘지연(地緣)산업의 육성과 세방화(世方化)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한·미 FTA의 경우 나라의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최소기본조건인 농어업의 붕괴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 환경생태계, 식량주권 파괴를 가져올 게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경제문제를 정치문제화해 미국의 시나리오에 맞춰 FTA를 밀어부쳤고, 이명박 정부 또한 미측 FTA 비준의 전제조건인 ‘광우병 의심 쇠고기 시장’을 활짝 열어줬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한·미 FTA 이후 위기의 농업·농촌을 회생시킬 ‘혁명적인 대안’으로 김 총장은 농가부채 해소책을 내놓았다. IMF때 기업부문에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농가부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중앙정부의 경우 WTO가 허용하는 범위의 농정과제와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농정일반을 포괄적 예산방식으로 지방정부와 농업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야만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식품 가공업에 대한 농업인 참여 유도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보완 ▲소비자단체와 농민단체의 연대강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수출주도농업 육성 등에 혁신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민이 추구하는 웰빙에다 친환경 산물, 아름다운 경관, 향기높은 전통문화·예술 등 농촌만이 갖는 특유한 어메니티를 결합시켜 지속적인 도농 상생운동을 전개하는 작업도 시급하다고 김 총장은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알프스산맥 접경국가들이 특유의 전통식품과 휴양을 접목 녹색체험산업(Green Industry)을 일궈냈듯이, 우리만이 갖는 전통과 음식, 문화 등을 지연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 지연산업과 어메니티를 한데 묶어 세방화(glocalization, 세계화+지방화)하는 것만이 우리 농업·농촌이 개방체제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불성실 납세’ 고소득자 338명 세무조사

전문직·유흥업소·부동산임대 업자 등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1일~6월2일)를 앞두고 불성실 혐의가 큰 납세자 등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비용 과다계상 혐의자,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개별 관리대상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다.

업종 및 유형별 조사대상자는 피부과·성형외과·치과·안과·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 입시학원·음식점·숙박업소·고급 유흥업소·결혼관련업종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한 현금수입업종 103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자·폐자원 재활용 도매상 등 기타 불성실 신고업체 27명이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불성실 신고행태를 보면 피부과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친인천 명의로 위장했고 성형외과·치과·안과 등은 보험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루를 했으며 변호사들은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입시학원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아 신고를 누락했고 숙박업소는 음식료를 봉사료로 변칙처리했으며 고급·대형 유흥업소는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조사대상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자는 임대료나 분양가액을 축소 신고했으며 폐자원 재활용 도매상은 허위명단을 이용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고 매입가를 부풀렸다.

국세청은 다음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기간에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문제점 등을 신고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전국 RV차량 동호회 마케팅

뉴카렌스·카니발 등 6개 차량

순천·속초 등서 ‘동호인의 날’

기아자동차가 전국 RV(레저차량)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동호회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26~27일 뉴카렌스, 그랜드 카니발, 엑스트렉, 카스타 등 총 6개 차량의 동호회 회원들이 순천을 비롯해 문경·속초·태안 등에서 정기모임을 갖는 ‘기아 동호인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동호회는 1년에 한번씩 모임을 가지며 이날 회원들은 ▲차량정보 공유 ▲고유가 시대 경제적인 운전요령 습득 ▲소모품 교환 등 경정비 요령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기아차는 이번 모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일부 소모품 무상교체 ▲차량 안전관리 요령 등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모하비 시승기회를 제공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동호회를 결성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의 정보공유가 활발해지면서 동호회는 사이버상의 여론 조성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아차는 동호회 행사지원을 통해 고객들의 사후관리는 물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 창업 ‘시들’

원자재값 급등·지방 건설경기 침체 여파

1분기 신설법인 788개 전분기보다 16% ↓

원자재값 급등과 지방 건설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1·4분기 광주·전남의 창업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광주·전남의 신설법인 수는 788개로, 지난해 4·4분기(914개)에 비해 15.9%(126개) 줄었다.

이처럼 창업활동이 둔화된 것은 올들어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줄줄이 오른 데다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창업심리 자체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1·4분기 신설법인 수가 153개에 그칠 만큼 창업위축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전분기보다 27.4%(42개)나 감소한 것으로, 원자재값 급등과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업체들의 경영난이 날로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1·4분기에 새로 문을 연 건설부문 법인은 203개로 전분기에 비해 16.3%(33개) 줄었다. 최근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지방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철근, 시멘트 등 건자재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창업심리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서비스업도 1·4분기 신규법인이 395개로, 전분기보다 4.1%(16개) 감소하는 등 전 산업부문에 걸쳐 창업활동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신설법인이 378개로 전분기보다 13.5%(59개) 감소했으며, 전남도 410개로 3개월새 14.0%(67개)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기업 채산성이 나빠진데다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 마저 위축되는 등 지역 산업계 전반이 대내외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방교부세 5조4천억 조기 집행

기획재정부는 28일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정산분 5조4천133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15조3천428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 2조9천591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4천542억원이 집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액을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농협전남본부, 전남도·道교육청 공동협약

전남産 축산물 소비 확대 나선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해 전남산 안전축산물 소비확대에 나섰다.

전남본부는 전남도,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28일 안전 축산물 소비확대에 대한 공동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광주 금남로 소공원에서 광주시·전남도민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대적인 ‘녹색의 땅, 전남산 축산물 소비촉진 다짐대회’를 가졌다.

협약안에서 전남도는 전남산 축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보조금의 지원확대를, 전남교육청은 전남산 축산물을 학교급식자재로 우선 사용을, 전남농협은 학교급식을 위해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이날 다짐대회 참석자들은 신토불이 축산사랑에 대한 염원을 담은 풍선을 날렸고, 충장로 1가 입구에서 광주우체국 앞까지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中企 R&D, 업체당 3천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R&D)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해주는 ‘개별기업의 R&D기획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부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진단하고 기업의 R&D 책임자와 한팀을 구성해 향후 R&D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가의 자문을 수용해 기술혁신을 추진할만한 능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신청자격이 제한됐다.

중기청은 해당 기업에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지원해줄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30일까지 과제신청 홈페이지(www.smtrm.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